

# 尹,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서 '대북 대응' 성과내나

### 尹, 北 제7차 핵실험 앞두고 한·미·일 정상 잇따라 만나 박근혜, '한미→한미일→한일→한중 회담' 하루 동안 소화 이명박, 천안함 사태 후 한·미, 한·일 정상과 잇따라 회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대북 대응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 강화도 관심사다.

미국·일본과의 잇따른 양자·다자 회담은 압박한 북한 제7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을 반영한다.

한반도 문제와 관계 깊은 주요 국가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큰 외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3국이 새로 운 대북제재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미·일 정상이 이같은 릴레이 회담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약 3시간 동안 연쇄적으로 소화했다.

이번 윤 대통령 일정과 비교하자면 '한·중 정상회담'이 추가된 것이다. 물론 윤 대통령이 현재 참석한 건 다자 국제회의의 기구이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한 곳은 핵 안보에 방점을 찍은 회의체라는 차이점이 있다.

핵심 이슈는 그때도 '북핵'이었다.

2016년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직후다.

릴레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됐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했다.

이어 "한미일 3국은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히 조율해 나가면서 국제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하루 동안 한·미, 한·일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한 적이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당시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정상과 개별 회담을 진행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이 벌어진 후였다.

특히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의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이 이웃이자 동맹국인 북한에 대해 자제력을 발휘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과 계속되는 문제들을 의도적으로 눈감는 것은 다르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현 정부와 대북 기조가 달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2019년 12월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정상들과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이 이 회담을 통해 3국이 북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판 민 쯘 베트남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의 비핵화 노력과 자유무역 촉진에 협력기로 하는 '향후 10년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을 놓고 한·일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며 이 회담은 유명무실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과의 마지막 정상회담으로 기록됐다.

최이슬기자

## “전태일 52주기…노동자 위한 정치하겠다”

### 민주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태일 열사 52주기를 맞아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산화한지 52년이 되는 날이다. 1970년 그 날의 외점은 오늘을 사는 노동자에게도 큰 울림으로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또 낡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동법이 필요하다. 진짜 사장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고, 노동자를 옥죄는 손배 가담류 폭탄을 막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노동자의 삶과 생명을 지키겠다. 민주당은 전태일 열사의 마음을 담아 노동자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환기자

## 민주, 오늘부터 국조·특검 서명운동 전국으로 확산

### 사흘째 서명운동…국조 명분·여권 동참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실시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장외 여론전을 통해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명분을 쌓고, 여권이 동참하지 않게 되더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진행된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전남 서울시장, 경기도당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고 오는 14일에는 오전 11시 경남도당(창원시청 후문 정우상)과 광주시당(유스퀘어 광장), 오후 4시 인천시당(부평역 광장) 등에서 발대식이 예정됐다.

이어 ▲15일 오전 11시 대전시당(대전역 광장), 오후 2시30분 대구시당(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오후 3시 강원도당(춘천 명동입구) ▲16일 오후 1시20분 제주시당(제주시청 앞 광

장), 오후 7시30분 부산시당(서면 주디스태화 앞), 전북도당 및 울산시장 ▲17일 오전 10시 전남도당(나주), 오후 2시 충북도당, 오후 4시 충남도당(천안 신세계백화점 앞) 등에서 발대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열린 서울시당 발대식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지도부를 비롯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등을 촉구했다.

서명운동은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23만686명이 참여했다. 오프라인 참여자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서명운동 종료 시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서명운동이 국정조사 뿐 아니라 특검 설

시 요구도 담겨있는 만큼 지속 전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큰 데도 ‘장관 하나 못지키느냐’는 대통령의 역정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고 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나마 민심을 따르려는 여당 내 움직임조차도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의 공개 저격으로 사그라들고 있다”며 “민심보다는 대통령의 의중을 중시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에 의회민주주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담하다. 민의를 받드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선욱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